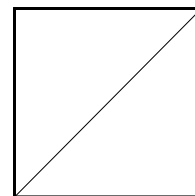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329 호
의 결 연 월 일	2020. 9. 9. (제 16 차)

의
결
사
항

(주)한국씨티은행에 대한
부문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은 성 수
제출 연월일	2020. 9. 9.

1. 의결주문

(주)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하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별지>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.

2. 제안이유

(주)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(주)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‘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’ 등이 적발되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자본시장법’이라 함)」 제449조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(붙임1)

- 「자본시장법」 제47조(설명의무), 제71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7호, 제449조(과태료) 제21호·제29호
-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5항 제14호, 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[별표22]
-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20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1항 제9호 나목

- 「은행법」 제52조의2(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) 제1항 제1호·제4호
- 舊 「은행법」 제69조(과태료) 제1항 제9호, 제4항 제6호
- 舊 「은행법 시행령」(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) 제24조의4, 제3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[별표4]
- 「은행업감독규정」 제88조(구속행위 금지) 제5항, 제6항 제1호·제2호
-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1조(안전성의 확보의무) 제2항, 제51조(과태료) 제1항 제1호
- 「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」 제3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[별표3]
-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7조(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) 제3호, 제15조(해킹 등 방지대책) 제1항 제3호·제5호, 제17조(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) 제1항 제4호
-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제1항 및 제3항, [별표3] 과태료 부과기준, [별표6] 업권별 과태료 부과 기준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제1항,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 제1항,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제1항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제1항 내지 제3항, 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

다. 제재내용 공개안 (붙임2)

라. 관계부서 협의

- 제17차 제재심의위원회(2020.8.21.) 심의필
-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(2020.9.2.) 심의필

<별지>

(주)한국씨티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☐ 기관에 대한 조치

- (주)한국씨티은행 : 과태료 6억 1,250만원* 부과

*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

- 조치사유 : ①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(5억 7,600만원)
② 구속행위 금지 위반(50만원)
③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(3,600만원)
- 법적근거 : 「자본시장법」 제449조 제1항 제29호
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90조, [별표22]
舊 「은행법」 제69조 제1항 제9호
舊 「은행법 시행령」 제31조, [별표4]
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51조 제1항 제1호
「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」 제33조, [별표3]

☐ 개인에 대한 조치

- 부지점장 ○○○○ : 과태료 10만원 부과

- 조치사유 : 구속행위 금지 위반(○○○지점)

- 법적근거 : 舊 「은행법」 제69조 제4항 제6호
舊 「은행법 시행령」 제31조, [별표4]

○ 지점장 ○○○○ : 과태료 10만원 부과

- 조치사유 : 구속행위 금지 위반(○○지점)

- 법적근거 : 舊 「은행법」 제69조 제4항 제6호
舊 「은행법 시행령」 제31조, [별표4]

2. 조치사유

가.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

(1) 설명의무 위반

- 「자본시장법」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,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,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

○ (주)한국씨티은행 △△△△△부는 2017.11.1.~2018.12.18. 기간 중 일반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

외환파생상품의 내용 및 거래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,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(16건, 178억원)

(2)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

□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 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「자본시장법」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도

- (주)한국씨티은행 △△△△△부는 2017.11.1.~2018.12.18. 기간 중 일반 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

외환파생상품의 내용 및 거래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「자본시장법」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(16건, 178억원)

나. 구속행위 금지 위반

□ 「은행법」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,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(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)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예금·적금을 판매하거나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(1) ○○○지점에서는

중소기업인 차주 (주)○○○○○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1건(3,000만원)과 관련하여, 여신실행일(2017.1.6.) 전후 1월 이내인 2017.1.20. 월수입금액(125만원)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정기적금을 차주의 대표자 △△△에게 판매하여 적금해지일(2017.4.26.)까지 총 500만원을 수취하였음

(2) ○○지점에서는

중소기업인 차주 (주)○○○○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2건(27,000만원)과 관련하여, 2017.3.20. 차주의 대표자 △△△에게 집합투자증권(가입금액 2,000만원)을 판매하고 2017.4.7. 동 여신 2건을 연장 실행하였음

다.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

(1)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

□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1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, 개발,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,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·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

- ① 은행은 △△본부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, 개발,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를 도입하였으나,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△△, △△△ 등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연결을 허용하였음
-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및 장애대응 등의 목적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의 제조·공급사로부터 인터넷망을 통해 대용량 저장장치 장비에 원격 접속을 허용하였으며,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운영상태 및 장애발생 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해 각 제조사의 모니터링 센터로 송신하였음

- ③ 은행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전 부서 임직원 업무용단말기의 망분리
예외처리 대상을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승인한 특정 외부기관으로
제한하지 않고, 모든 정부 홈페이지 및 일반 홈페이지, 그룹사에서
사전 정의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허용한 사실이 있음
- ④ 재택근무 및 출장 등을 위해 인터넷망을 통한 원격접속시스템을 운용
하면서, 임직원 ○○명이 은행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
○○○회에 걸쳐 원격으로 접속한 사실이 있음

(2)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불철저

-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1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
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
(이하 “DMZ구간”) 내에 이용자정보 등 주요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
아니하여야 하고,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
암호화하여 저장·관리하여야 하는데도
- DMZ구간에서 운영하는 ‘□□□□ 시스템’ 서버 로그파일에 총
○○○건의 이용자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음

(붙임1)

관 계 법 규

1. 은행관련 법규

□ 「은행법」

제52조의2(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) ① 은행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"불공정영업행위"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9.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

□ 舊 「은행법」(2017.4.18. 법률 제1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6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9.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
- ④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6.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

□ 舊 「은행법시행령」(2019.12.31. 대통령령 제3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24조의4(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) ①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(이하 "불공정영업행위"라 한다)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6.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,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해당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상품의 특성,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

제3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<별표 4 (과태료의 부과기준)>

1. 일반기준

- ①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금액
처. 은행이 법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 제9호	3,000

□ 舊 「은행법시행령」 (2017.10.17. 대통령령 제2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3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舊 <별표4> 과태료의 부과기준(2017.10.17. 개정 이전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금액
저. 은행이 법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 제9호	2,500
처.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 제4항 제6호	250

□ 「은행업감독규정」

제88조(구속행위 금지) ① 영 제2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"여신거래"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
1. 원화대출

⑥ 영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"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해당 차주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
가.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금·적금

2.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판매하는 행위

마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

⑨ 감독원장은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영 제24조의4제1항제1호·제2호·제5호·제6호·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「금융기관점사및 제재에관한규정」 제20조제2항 및 <별표 3>에도 불구하고 <별표 8>을 따라야 한다.

<별표 8 (과태료의 부과기준)>

1. 과태료 산정방식

가. 영 제24조의4제1항제1호, 제2호, 제5호, 제6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대상건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.

- 1) 은행에 부과하는 경우 : 영 <별표 4> 제2호저목의 금액
- 2) 임원등 또는 직원에 부과하는 경우 : 영 <별표 4> 제2호처목의 금액

나. 구속행위의 동기 및 구속비율(여신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금액을 여신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대상상품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대상건별 예정금액을 산정한다.

- 1) 영 제24조의4제1항제1호, 제5호, 제6호 또는 제88조제7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: 제88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월수입금액
- 2) 영 제24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: 차주의 은행상품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총 금액
- 3) 제88조제7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: 실질적으로 차주의 자금사용이 제한된 총 금액

다. 위반자에게 가중·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·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.

2. 예정금액의 산정

과태료 부과대상건에 대하여 구속행위의 동기 및 구속비율, 대상상품을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.

구속비율	대상상품* 동기	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취급상품		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은행취급상품	
		고의	과실	고의	과실
100분의 10 이상	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	기준금액의 100%	기준금액의 50%	기준금액의 100%	기준금액의 50%
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				기준금액의 50%	기준금액의 25%
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미만	100분의 2 미만	기준금액의 50%	기준금액의 25%	기준금액의 25%	기준금액의 12.5%
100분의 2 미만		기준금액의 20%	기준금액의 10%	기준금액의 10%	기준금액의 5%

*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취급상품과 그 밖의 은행취급상품을 모두 판매한 경우 각 구분에 따라 산정된 예정금액 중 큰 금액을 해당 부과대상건의 과태료 예정금액으로 한다.

3. 최종 부과금액의 결정

위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을 감면하거나 예정금액의 50%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- 1)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<별표 3>에 따른 가중사유 또는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
- 2)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소기업(「통계법」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소기업은 제외한다)이 차주인 여신거래와 관련 영 제24조의4제1항제1호, 제2호, 제5호, 제6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한 경우 예정금액의 20%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4. 과태료 부과 면제 및 기타사항

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<별표 3>에 따른다.

2. 자본시장 관련 법규

☐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

제47조(설명 의무)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,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0조(자료의 기록·유지)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
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·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71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.

7.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제44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1. 제47조제2항(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

29. 제71조(제7호에 한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제166조의2(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)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·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.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,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.

제44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21. 제47조제2항(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
- 29. 제71조(제7호에 한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62조(자료의 기록·유지)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- 1. 영업에 관한 자료
 - 가. 투자권유 관련 자료: 10년
 - 나. 주문기록,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다자간매매체결업무 관련 자료 : 10년
 - 라. 매매계좌 설정·약정 등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: 10년
- 5. 그 밖에 법령에서 작성·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·서류 :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(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.)

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·구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68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- 14.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

제186조의2(위험회피목적 거래)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"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·부채 또는 계약 등(이하 "위험회피대상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.

- 1.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
- 2.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

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.

<별표 4 (과태료의 부과기준)>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다. 법 제47조제2항(법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449조 제1항제21호	6,000
터. 법 제71조(제7호에 한정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정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정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정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449조 제1항제29호	5,000

□ 「금융투자업규정」

제4-13조(기록보관) ① 금융투자업자는 영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(계약서 등 권리·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·의무 및 사실관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) 서면, 전산자료,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·규정 등에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할 기록이 사후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·조사시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.

<별표 12 (금융투자업자의 기록보관)>

구분	자료의 종류	최소보존 기간
영업에 관한 자료	1. 투자광고, 투자권유 및 투자계약 관련자료 ① 투자자의 일반정보(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파악한 정보) - 투자자가 다수의 계좌·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기록으로 대체가능 ② 약관을 포함한 투자자에게 제공한 문서(서신, 안내문, 투자권유문서 등을 포함) - 약관, 투자설명서, 상품설명서, 위험고지문서 제공시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도 포함 -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인서류 ③ 투자광고에 관한 사항 - 방송광고를 제외한 광고의 사본 - 방송광고 등은 광고문안 및 광고내용 ④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 관련 - 장외파생상품 거래대장 - 상근임원의 승인서류, 거래상대방의 신원확인서류 - 거래상대방과 수수한 제반서류 ⑤ 투자계약서 또는 계좌계설 관련서류	10년

제4-20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9.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.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.

- (1)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
- (2)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

3.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규

□ 「전자금융거래법」

제21조(안전성의 확보의무) ① 금융회사·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(이하 "금융회사등"이라 한다)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,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, 전자금융업무 및 「전자서명법」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39조(감독 및 검사)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1.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
2.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
3.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,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
4.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

제5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

□ 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」

제3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<별표 3 (과태료의 부과기준)>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바.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 제1항제1호	5,000

□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

제7조(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) 법 제21조제2항의 "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 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.

1. 인력, 조직 및 예산 부문
2. 건물, 설비, 전산실 등 시설 부문
3. 단말기, 전산자료,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
4. 그 밖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5조(해킹 등 방지대책)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·운용하여야 한다.

3.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(무선통신망 포함)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·차단 및 접속 금지(단,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
5.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, 개발,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(단,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)

제17조(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)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

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·운용하여야 한다.

4.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할 것(다만,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·관리하여야 한다)

4. 검사 및 제재 관련 법규

□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

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,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 과징금 부과기준, 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 및 <별표6>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(2017.10.19. 개정)

2. 과태료 산정방식

가.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(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.

나.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,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. 다만,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※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·장소적 근접성, 행위의사의 단일성,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.

다.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(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을 산정한다.

라. 위반자에게 가중·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·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.

- 마.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·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.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.
- 바.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

3. 예정금액의 산정

가.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.

위반결과 \ 동기	상	중	하
중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
보통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
경미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	법정최고금액의 20%

※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중 대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(「방송법」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·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·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
- (2) 보 통 : ‘중대’, ‘경미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
- (3) 경 미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

※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상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
- (2) 중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
- (3) 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나.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(이하 “예정비율”이라 한다)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(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.

다.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‘중대’로 본다.

<별표6>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(2017.10.19. 개정)

1~2. (생략)

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자본시장법”이라 한다)」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(예정비율은 <별표3>에 따른다)

나. 「자본시장법」 제47조제2항, 제449조제1항제21호, 동법 시행령 제53조제2항(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, 준용규정 포함)

(1) 위반건수 : 확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계약 건수

(2) 위반결과의 판단 : 위반한 계약 건별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판단

1) 중 대 : 판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

2) 보 통 : ‘중대’, ‘경미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3) 경 미 : 판매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

※ 설명의무는 이행하였으나 확인절차만을 누락한 경우 등 형식적으로는 법규 위반에 해당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% 적용

5. 질서위반행위규제 관련 법규

☐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,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17조(과태료의 부과)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.

□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

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1. 당사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과 주소
 2. 과태료 부과 원인인 되는 사실,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
 3.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
 4.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
 5.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(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)
-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,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.

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(붙임2)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(주)한국씨티은행

2. 제재조치일 : 2020. 9. 15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○ 기관주의 ○ 과태료 부과(6억 1,250만원)
임직원	○ 과태료 부과(10만원) 2명 ○ 자율처리필요사항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등

☐ 한국씨티은행(이하 “은행”)은 2017.1.2.~2018.12.31. 기간 중 일반 투자자 60개 기업과 장외파생상품 중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아래와 같이 「자본시장법」을 위반하였음

(1)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

☐ 「자본시장법」 제166조의2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파생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한하여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가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데도

- 은행(○○○부)은 2017.1.2.~2018.12.28. 기간 중 일반투자자 58개 기업과 거래하면서

기업의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,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*를 초과하여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였음(5,042건, 8조 3,627억원¹⁾)

* 통상 국내은행은 기업과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대상과 관련한 개별 근거자료를 대신하여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제출받아 연간 거래한도를 설정·운영

(2)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

(가) 설명의무 위반

- 「자본시장법」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,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,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

- 은행(○○○부)은 2017.11.1.~2018.12.18. 기간 중 일반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

외환파생상품의 내용 및 거래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,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(16건, 178억원)

1) 2018.12.31. 달러 기준환율(1,118.1원)을 사용하여 계산.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등 지적 관련 이하 동일

(나)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

□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「자본시장법」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도

- 은행(○○○부)은 2017.11.1.~2018.12.18. 기간 중 일반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

외환파생상품의 내용 및 거래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「자본시장법」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(16건, 178억원)

(3) 영업에 관한 자료 기록·유지의무 위반

□ 「자본시장법」 제60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에 관한 자료를 10년동안 기록·유지하여야 하는데도

- 은행(○○○부)은 2017.1.2.~2018.12.31. 기간 중 일반투자자 52개 기업과 체결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5,566건에 대한 투자자 일반 정보 등 영업에 관한 자료 86건을 기록·유지하지 아니하였음

< 관련법규 >

「자본시장법」 제47조, 제71조

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 제5항 제14호

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20조 제1항 제9호 나목

나. 구속행위 금지 위반

- 「은행법」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,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(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)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예금·적금을 판매하거나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(1) ◇◇지점에서는

중소기업인 차주 (주)■■■■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1건 (3,000만원)과 관련하여, 여신실행일(2017.1.6.) 전후 1월 이내인 2017.1.20. 월수입금액(125만원)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정기적금을 차주의 대표자 ♣♣♣에게 판매하여 적금해지일(2017.4.26.)까지 총 500만원을 수취하였음

(2) △△지점에서는

중소기업인 차주 (주)☆☆☆☆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2건 (27,000만원)과 관련하여, 2017.3.20. 차주의 대표자 ☼☼☼에게 집합투자증권(가입금액 2,000만원)을 판매하고 2017.4.7. 동 여신 2건을 연장 실행하였음

< 관련법규 >

「은행법」 제52조의2 제1항 제1호·제4호

舊 「은행법 시행령」 제24조의4

「은행업감독규정」 제88조 제5항, 제6항 제1호·제2호

다.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

(1)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

□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1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, 개발,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,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·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

- ① 은행은 ▲▲본부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, 개발,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를 도입하였으나,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♣♣, ○○○○ 등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연결을 허용하였음
-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및 장애대응 등의 목적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의 제조·공급사로부터 인터넷망을 통해 대용량 저장장치 장비에 원격접속을 허용하였으며,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운영상태 및 장애발생 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해 각 제조사의 모니터링 센터로 송신하였음
- ③ 은행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전 부서 임직원 업무용단말기의 망분리 예외처리 대상을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승인한 특정 외부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, 모든 정부 홈페이지 및 일반 홈페이지, 그룹사에서 사전 정의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허용한 사실이 있음
- ④ 재택근무 및 출장 등을 위해 인터넷망을 통한 원격접속시스템을 운용하면서, 임직원 ○○명이 은행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○,○○○회에 걸쳐 원격으로 접속한 사실이 있음

(2)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불철저

-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1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(이하 “DMZ구간”) 내에 이용자정보 등 주요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,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저장·관리하여야 하는데도
- DMZ구간에서 운영하는 ‘■■■■ 시스템’ 서버 로그파일에 총 ○○○,○○○건의 이용자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1조 제2항

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7조 제3호, 제15조 제1항 제3호·제5호, 제17조 제1항 제4호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은행과 자본시장과 전자금융과	일반은행검사국 IT·핀테크전략국
연 락 처	02-2100-2676 02-2100-2653 02-2100-2811	02-3145-7062 02-3145-7429